

수산물 4개 품목 유통비 51.8%

생산·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 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 중 명태가 가장 높아

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 등 식탁에 많이 오르는 수산물 4개 품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1.8%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이 치르는 이들 수산물 값이 1000원이라면, 생산자 수취가격이 482원, 도소매 유통비가 518원을 각각 차지한다는 뜻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생산·수급현황과 산지·도매·소매단계의 수산물 유통경로 비용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명태 66.3%, 고등어 56.7%, 갈치 44.7%, 오징어 45.9%다. 4개 품목 평균은 지난해 생산량 가중치 적용시 51.8%다.

이 기준에 따라 보면 유통비용은 산지에서 83원, 도매 단계에서 140원, 소매 단계에서 235원이었다. 소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높은 이유는 수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추가비용 발생, 손질 및 포장 등 상품성 제고 노력, 매장 유지관리비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명태는 냉동 상태로 유통되다 보니간 냉동 차고 비용

이 증가한다. 그래서 간접비용이 늘어난 것"이라며 "반면 선어는 냉동되지 않아서 비용이 적게 들고 유통이 빨리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쌀, 감자, 고구마, 양파 등 농산물 주요품목 평균 유통비용은 53.4%로 집계(201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됐다"며 "이와 비교해보면 유통비용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조사는 2016년 3월 시행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지난해 3~12월 실시했으며, 수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4개 대중성 품목별 유통실태조사로 나눠 진행했다.

지난해 수산물 총 생산량은 374만 3000톤으로 2016년(327만톤) 대비 14.5% 증가했다. 이 중 양양어업 생산량이 231만톤으로 2016년(187만2000톤) 대비 24.3% 늘어나며 전체 생산량의 62%를 차지했다.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2.1%, 3.5% 증가한 92만7000톤, 47만톤으로 집계됐다.

2016년 기준 수산물 국내생산량은 327만톤, 국내소비량은 439만톤으로 2016년 수산물 자급률은 2015년(71.5%)에 비해 소폭 상승한 74.5%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산물 전체 계통출하율은 39.4%로 조사됐다. 계통출하는 수산물을 수협 유통체계(산지 유통관리장)를 통해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연근해 수산물의 경우 계통출하가 87%, 기타 유통도매업자 등을 통한 비계통출하가 13%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물량이 유통되는 곳은 지역 전통시장(35~40%)으로, 소비지 도매시장(17~22%)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양식산 수산물의 계통출하율은 28.8%이며, 이 중 생산액 비중이 가장 높은 활어(34.2%)의 경우는 약 40%가 계통출하, 나머지 60%가 산지 수집상을 통해 출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산 수산물의 경우 원양선사와 도매업자간 거래를 통해 저장·가공업체로 유통되는 비중이 40~45%, 소비지 도매시장과 전통시장으로 유통되는 비중이 35~40%였다.

2016년 기준 전국 산지위판장은 213개이며, 총 거래물량은 114만4000톤,

거래금액은 3조5749억원으로 조사됐다.

거래되는 수산물 형태는 선어가 51.1%로 가장 많았다. 산지위판장 유통종사자는 총 7145명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중도매인(위판되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3744명으로 5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 중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은 총 18개소로, 거래물량은 41만4000톤, 거래금액은 1조 4731억원으로 확인됐다. 그 중 생산자 개인출하 비중이 46.8%로 가장 높았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는 총 3355명이며 중도매인이 150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연간 매출액은 대부분(77.3%) 10억원 미만에 불과해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반적인 유통현황을 보여주는 최초의 조사"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수산물 유통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유통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



희망의 공부방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난 16일 고창읍에 위치한 고창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68호' 오픈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전북은행 제공>

총수 일가 사익편취 대기업 집단 지정 개편 논의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

총수 지정 등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진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지분을 조정과 부당성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경제환경이나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편 요구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사익편취 규정이 도입됐으나 이후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빠져나가거나 지주회사 제도를 과도한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끼워팔기나 차별행위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업자가 같은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알고리즘 자체가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설정된 알고리즘 담합처럼 사업자 간 합의가 없는 담합의 경우, 현행 조항으로는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유진수 수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과 21명의 위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으로 구성된

다.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을 재정비한다. 현행 열거식 조항이 최근 발생하는 주요 위반행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경쟁제한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등 불공정거래 체계도 정비한다.

알고리즘 담합이나 매출액 기준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제도도 손질한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성실협조 의무를 위반한 자진신고자의 감면 지위를 박탈하는 안도 추진한다.

기업집단 분과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지주회사 제도 개편에 대해 다룬다. 기업집단 지정에서는 총수(동일인) 지정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 등을, 지주회사는 지회사 지분율과 부채비율 요건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계열사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을 높이고 부당성 입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다룬다.

절차법제 개편에서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비참여위원회도 개편 등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는 5개월 간의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들 과제를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삼조 공정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경쟁법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경쟁법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점수 조작 사실 드러나... 3월까지 퇴출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한 조사 결과 점수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부와 강원랜드는 점수 조작 부정합격자 퇴출조치를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조사 결과 부정합격자 226명이 서류전형·인적성 평가 등 각 전형 단계마다 점수조작에 의해 부정 합격 처리되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3년 하이원 교육생 1·2차 선발과정에서 총 5268명이 응시해 518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 중 498명이 청탁리스트에 의해 관리된 합격자였다.

특히 하이원 교육생 2차 선발과정에서는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21명의 응시

자들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재차 청탁 압력을 넣어 추가 합격됐다. 이들 중 17명은 재직 중이다.

2013년 11월 강원랜드 워터월드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국회의원 전 비서관의 부정채용을 위해 맞춤형 채용조건·평가기준을 마련, 최종 부정합격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이원 교육생 493명 부정합격자의 청탁리스트가 작성·관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26명 부정합격자에 대한 부정청탁자들이 강원랜드 사장·임직원, 국회의원, 지자체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1차 TF에서는 강원랜드 측과 ▲부정합격자 전원퇴출 세부계획 ▲피해자 구제방안 ▲수사의뢰 대상 ▲소속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차기회의에서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

가상화폐 취급소에 '금융권 수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추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영업 중지 등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 20일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사이트)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거래내역 정보 등을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래소에 대해선 영업 중지 등 시정명령과 인직원 제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취급업소의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가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끊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은행권에 준하는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담겼다.

의심거래보고(SRT), 고객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된다.

또 이같은 의심거래보고, 고객현금거래보고 등 의무 이행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는 5년간 보존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제안안에서 "가상통화는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합법 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